

社說

장관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명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검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상당수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및 품수 증여' 논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편향성' 논란은 벌써부터 야당의 지명철회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7억7천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분당 아파트를 20년 넘게 보유하다가 지난달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는데, 관바로 딸과 입차 계약(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을 맺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다.

'1가구 2주택 1 분양권' 보유자였다가 장관으로 지명받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세탁된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지 말란 법은 없으나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은 또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로 품수 증여까지 했다고 하니, 과거 정부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고 이를 규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인재대 교수의 SNS 발언등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썼다.

이들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갑염된 좀비'라고 비하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폄하했다. 장관 내정자는 커녕 대학교수로서도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 밖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2중 국적 보유가 드러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특례에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불거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남의 한국 선급 특혜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청와대도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오려나

금남로에서



이문수  
본지 사장·편집인

얘기가 아니다. 공복의 자세는 공무원 시험에서나 등장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며, 갑질 행태도 여전하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쓰면서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공무원 연수를 핑계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1년에 한 두 차례씩 해외에 나가 공금을 펴평 쓰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연말이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써야 다음 해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며 말쑥한 보도블럭을 바꾸는 기사를 최근 몇 십년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지켜왔다.

그런데 공무원에도 '급'이 있다. 이른바 고위 공무원, 특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칼자루를 쥔 고위 공무원은 왕중왕이다. 수상하기 짝이 없는 뭇짓돈을 받았어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아니고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뇌물 뿐 아니라 성상납도 유아무야다. 대국민 오디션 통해 선발된 K-팝 가수가 못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 찍어 단독방에 올린 사실이 들어나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6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권이 바뀔 현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국가의 헌법상 원칙이다. 과연 그럴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 이 사건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문을 무색하게 만든다.

건설업자 윤 모씨가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에 유력 인사들을 불러 은밀하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영화나 나올 법한 추악하고 비열한 사건이다.

수영장에 사우나와 노래방 시설까지 갖춘 호화별장에 공무원들을 불러 접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음험했다. 여기에 애가씨들까지 불러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은 기수 겸 방송인 정모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은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15건 가운데 하나다. 진상조사를 벌인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에서 추려낸 것들이며, 이 중 '별장 성접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밝혀진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이 서둘러 이 사건을 뒤편에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검찰은 성 접대 증거 중 하나인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얘기는 다르다. 민

갑룡 경찰정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무혐의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조사단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 전 차관을 소환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이 김 전 차관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바뀔때 공직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의 그대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처벌혁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에게 전통시장은 정겹고 그리우며 추억이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 또한 마음이 아파진다.

전통 시장은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출입구와 통로가 좁고 노후된 시설이 많으며, 점포가 밀집돼 있고 가판대 주변이나 창고에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전·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먼지나 주변 적체 물로 인해 열이 축적돼 발생하는 기계적 요인,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 도구, 담뭍담 등이 있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진

독자기고

정겹고 그리운 '추억의 전통시장'을 지키자

우리에게 전통시장은 정겹고 그리우며 추억이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 또한 마음이 아파진다.

전통 시장은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출입구와 통로가 좁고 노후된 시설이 많으며, 점포가 밀집돼 있고 가판대 주변이나 창고에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전·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먼지나 주변 적체 물로 인해 열이 축적돼 발생하는 기계적 요인,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 도구, 담뭍담 등이 있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진

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소방교육을 통해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이 스스로가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 이웃주민과 지역사회가 화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종휴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독자기고

소방안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소방안전교육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등 관공서조차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대형사고를 예를 들어보자 초기대응을 잘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용도 미미하다.

둘째,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 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은 한시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남희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	국장대우	주병택	010-3642-2444	강진	차장	전문재	010-6221-3346
동구	국장대우	서7인	010-4602-0708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남구	기지	이유빈	010-9632-5879	황성	부장	정운남	010-3640-6323
북구	부청	김정안	010-9464-2555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아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89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곡성	부국장대우	심성범	010-3608-2634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구례	국장대우	심건익	010-4624-0005	함평	차장	박형호	010-5189-5839
보성	국장대우	김동욱	010-3602-8103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회선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883
강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진도	차장	김관태	010-3632-4000